

시간이 해결해준다?

정부의 속내가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개시로 우리 농업계뿐만 아니라, 교육계, 의료계, 문화계 등 모두가 들쭉인다. 그런데도 얼마 전 대학로에서 개최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 보도에는 어질러진 거리와 교통체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왜 거리로 나와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뒷전인걸 보면, 언제나 언론은 우리편만은 아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아무튼, 우리 정부는 한·미 FTA 협상개시에 대해, 쌀은 예외로 하겠다,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으로 봐서, 지난 UR협상과 마찬가지로 우리 축산물이 또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 농업에서 쌀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 우리의 주식이 쌀이고, 단일식품으로서 제1의 소비량을 갖고 있는 쌀의 중요성에 대해 부인할 마음도 추호에도 없다. 그러나, 쌀의 소비량이 계속줄어 1인당 연간 소비량이 80kg정도에 그치고 있는 반면, 그다음 소비량을 갖는 식품은 63kg의 우유로서, 유제품 소비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유 = 제2의 식량' 이라는게 낙농가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비록 시유소비가 정체되어 고민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경종농가에 비해 이제는 채 9,000호도 되지 않는 소수 농가들의 산업이라는 이유

로 낙농산업의 희생만을 담보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한다. FTA체결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면서 개방을 당연시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자문해본다. 현재 우리나라 낙농상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러나, 모두가 문제인식하면서도 안일하게 서로 눈치만 보면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것은 왜 일까?

원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04년 2월 '집유체계 직결체제 전환' 이 발표되었고, 그해 12월 농업·농촌 종합대책으로 확정·발표되었다. '집유체계 직결체제 전환' 란 무엇인가? 낙농진흥회의 집유일원화 사업을 포기하고 과거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집유일원화사업 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생각하면, 우유수급 조절기구로 설립한 낙농진흥회가 우리나라 전체 우유수급 조절은커녕, 전체원유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을 갖고 찢찢매고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그만두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낙농진흥회 농가들이 크게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권역밖 농가들에 비해 오히려 불이익만 보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 낸지가 벌써 수년째니, 계속적으로 재정을 쏟아 부을 수도 없고 무슨 수를 써도 써야 겠다는게 정부의 판단이었을게다. 또

농가들 나름대로도 이대로 있다가는 결국 농가다 죽는 꼴 되겠으니, 더 이상 이대로 있어서만은 안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 있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혹시라도 농림부가 골치 아픈 낙농정책에서 완전히 손을 떼려는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섰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온갖 설(說)들만이 무성한 채로 한해가 흘러, 지난해 7월에 발표된 농림부의 낙농대책(시안)은 단순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음을 실감케 했다.

그렇다면, 농림부(시안)발표를 접한 각 주체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유업체는 현재도 좋고, 시안대로 개편한다 하더라도 그다지 손해볼 게 없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는 듯 하다. 낙농진흥회는 복잡한 집유업무만을 빼고 기구개편으로 존속될 터이니 걱정없어 보였고, 농협중앙회는 전국단위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했던가? 농림부시안대로 가서는 더 어렵겠구나, 아니 낙농가들이 더 이상 설 땅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생산자단체는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 내놓기에 이르렀다.

그럼, 아직까지도 속 시원히 이렇다할 결론을 내놓지 못하면서 협의(?)중이라는 농림부(시안)과 생산자단체(시안)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소위 듣기 좋은 말로 그러는지는 몰라도, 농림부(시안)과 생산자단체(시안)은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전국단위 제도개편'이라는 근본목표는 같으나 방법은 차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아무튼 믿어보기로 하자. 진정 농림부가 생각하는 제도개편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얼마전 전문지 보

도를 통해 당초 진흥회만을 대상으로 한 집유체계 개편에서 전국단위 쿼터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전국단위 쿼터제를 어떠한 방안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인지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나 가장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만을 보고 이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안은 누가 반대하니까 안되고, 이런 방안은 돈이 많이 드니까 안되고 하는 식의 대책이라면, 결국은 땀질밖에 안될 터이다. 우리는 이미 낙농진흥회 설립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던가?

물론, 낙농산업 유지발전의 큰 틀에서의 목표는 같다 할지라도, 현재 각자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각자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여유를 부리며 보내버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이다. 목표를 위한 결단과 희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생산자단체의 시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유업체, 생산자측 시안은 생산자만을 위한 청사진일 뿐이라고 색안경부터 쓰고 보는 정부, 공감은 하지만 일단 내손에 쥐어지는 이득이 무엇인지 계산기부터 두들겨 보는 생산자들까지. 이래서는 우리 낙농의 미래는 없다. 누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전국단위 제도개편? 지금 난 이대로 좋으니깐 그건 나와는 상관없어", 혹은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스스로가 최대한의 노력을 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니까 말이다. ☹